

사회

“협회 가입하면 단속 안 걸린다”

외식업·휴게실협회 회원들에게 단속정보 통지 의혹 관련기관 유착 혐의 ... 관련협회 “있을 수 없는 일”

음식점이나 주점, 카페 등의 불법 영업 및 위생 점검 과정에서 단속 정보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단속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대처해 피해가는 반면, 미가입 업체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미성년자 출입 단속 기간이니 주의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자 표시 없이 온 메시지라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어떤 연락을 해오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주변의 다른 가게에도 불법광고물이나 미성년자 출

저는 광주 서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재 음식점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휴게음식점협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픈당시에 휴게음식점 직원이 와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가져갔고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1만원씩 걷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명목으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는것도 없이 회비를 걷어가고 있습니다. 또 말하시며 가입비 30만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입비가 30만원이라는것도 이해가 되지않고 말하시며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황포?가 더이상 행해지면 안될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어느 시기도 시가든 어찌저찌 기사나리보 도로 개사기나 여러 민형사 사범이 서구 한 음식점 주인이 휴게음식점협회의 가입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걷는 회비에 대해 항의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

입 단속 등을 알리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주인 박모(29)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11월 말 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 관련 협회를 찾았다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박씨가 허가 조건인 위생 교육 이수증명서를 떼어 줄 것을 요청하자 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먼저 협회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협회 회원이 되면 단속이 많지 않는데다 특별 단속 등은 대부분 기간을 정해 공지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 정보가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시민은 광주시청 게시판에 가입비(30만원)와 협회비 명목의 관리비를 걷어가는 협회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단속 정보 유출은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프션 등 불법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의심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구청의 집중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업체들이 단속 정보가 들어오면 잠깐 숨겨놨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내놓으면서 불법광고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동구 한 상가의 상인은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면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광고물을 숨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요즘은 경기침체로 예전처럼 단속이 많지 않는데다 특별 단속 등은 대부분 기간을 정해 공지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 정보가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휴게시설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측은 “현 체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회원 가입을 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임금체불 등 82건

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자가 66건으로 집계됐고, 과태료 부과 13건 3억9200만원, 사용종지 3건 등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한 뒤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아차 관계자는 “탑당자의 단순 실수나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크레인 농성 김진숙씨
檢, 징역 1년6월 구형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여·5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한 관사는 지난 31일 오전 부산법원 353호 법정에서 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공사사실을 김씨가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309일간이라는 장기농성을 벌여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도 때를 쓰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인종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공사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미리 작성해온 A4 용지 2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기성회비 문제 ‘반값 등록금’으로 풀어야”

한대련·민변 촉구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 “반값 등록금”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 31일 촉구했다. 한대련과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재정이 기성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회계법 도입이나 기성회비 소폭 인하는 기성회비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물타기’”라며 “교육재정 확보와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대련은 또 “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

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30일 이번 판결에 대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문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대련은 “전국 50여개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호균 전남도의회의장 또 선거법 위반 조사

이호균 전남도의회의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장이 설을 앞둔 지난 12일 5만5000원짜리 선물을 해산물 세트를 주민 등 27명(150만원 상당)에게 택배로 보낸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물 포장지에 부착된 의장 사진 명함, 선물 수량, 수신자 등을 파악했다. 이와함께 전남도의회 직원이 법인카드를 선물용 구입한 사

실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 도의회 버스를 이용, 목포시내 경로당 노인 255명에게 의회 방청과 도청 전망대 관광 등을 시켜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목포 선관위가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처리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원룸 임대 합니다” 대학 신학기 개강을 한달여 앞둔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상가 벽보판에 원룸, 하숙집 전단지까지 빼곡하게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

광주 도심서 조선중기 미라 나와 사대부 대표적 장례 회곽묘 방식

광주 도심의 공사현장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에 든 미라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미라 상태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분묘방식인 회곽(灰槨) 형태로, 16~17세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2시에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서 작업중이던 포클레인 기사 주모(45)씨가 나무로 된 관을 발견, 경계에 신고했다. 주씨는 경찰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독주택을 허무는 작업중이었는데 땅을 파보니 석회와 함께 관이 묻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관 속에는 시신 한구가 들어있었으며 물기가 없이 마른 상태로, 상투를 쓴 키 160cm 가량의 남자였다. 주씨의 신고를 받은 광주서부경찰은 “관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과거 묘지 일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죄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미라 상태의 시신은 삼베로 감싸져 있었으며, 관은 15cm 두께의 석회·세사·황토와 8cm 두께의 소나무판, 5cm 두께의 보통관 등 3겹으로 돼 있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 장학금**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